

현안과 과제

■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 한중간 경제 협력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1. 개요

-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對 한국 경제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경제적 마찰 양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후 9개월 만에 본격 배치 진행
 - 2016년 7월 한·미 양국 간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9개월 만인 2017년 4월 26일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가시화
 - 이에 따라, 관광, 문화콘텐츠 등에서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더욱 가속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이후, 중국은 우리에게 대해 국내 관광상품 판매 금지, 한류 제한뿐 아니라, 롯데 등 유통업체 영업 정지 등 경제보복이 확산
 - 하지만, 그동안 한중간 경제 교류를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국의 對 한국 경제 보복은 결과적으로 중국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양국의 경제 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한중 간 협력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사드배치 일정 및 중국의 보복 사례 >

| 주요국 | 사드배치 일자 |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
|------|---------|-----------------------------|
| 2016 | 2. 7 | -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
| | 2.17 | - 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 |
| | 7.13 | -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
| 2017 | 2.27 | -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 제공 안건 의결 |
| | 4.26 | - 사드 전격 배치 착수 |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한중 상호 간 경제손실 점검

① 교역

○ 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된 이후, 한중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으며, 보복대상은 주로 자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므로 보임

- 중국의 사드보복 시작 이후 우리의 對中 무역수지는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양국 간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올해부터 빠르게 회복

· 중국 사드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우리의 對中 무역수지흑자 누적액은 310억 달러로, 전년동기(2015.7~2016.3) 316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

· 반면, 올해 들어서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직접회로(HS8542), 환식탄화수소(HS2902)의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한국의 전체 對中 수출증가율도 회복세를 보임

- 중국의 사드보복은 상징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대상 품목은 주로 설탕, 화장품, 식품 등 제품에 집중
· 사드보복의 형태는 초반에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이 비교적 제재가 용이한 비관세 조치가 빈번하게 나타남

< 한중 간 교역 추이 >
(증가율,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교역부문 사드보복 의심사례 >

| 시간 |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
|--------|---|
| '16 | 10 월 -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착수 |
| | 11 월 -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 한국산 태양광소재(폴리아세틸,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착수 |
| | 12 월 - 한국산 화장품 수입불허 (품질 불량) - 한국산 라면, 김, 음료 등 식품 수입불허 (성분기준치 초과) |
| '17 1월 | -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식중독균 검출) |

자료 : 중국질량감독국 등 자료 취합.

② 투자

○ 한중 양국 간 직접투자가 급속히 둔화되는 가운데, 상호간 현지진출 기업의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한중 간 상호 직접투자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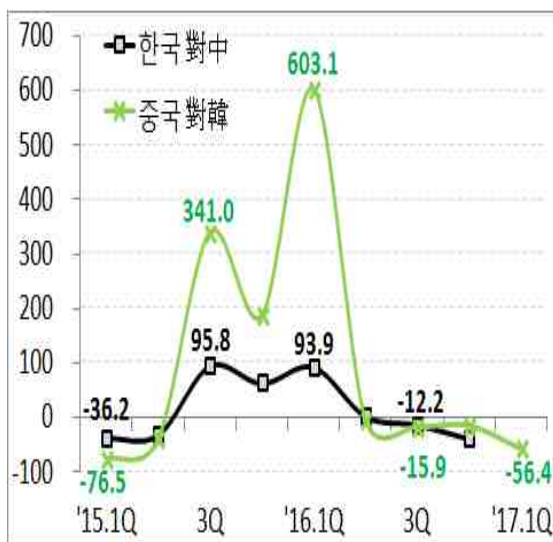
-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16년 1분기 93.9%를 기록하다가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도 2016년 1분기 603.1%를 기록하다가 최근 2017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6.4% 감소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 2015년 43.9억 달러, 2016년 40억 달러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 2015년 19.8억 달러, 2016년 20.5억 달러

-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후, 상호간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 수단으로 압박하면서 反한국기업 정서가 확산
-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한중간 직접투자 증가율 추이 >
 (증가율,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주 : 신고금액 기준임.

< 한중간 상호투자 관련 피해 의심사례 >

| 구분 | 주요 내용 |
|-------|---|
| 한국 기업 | - (2016.7) AIIB 한국측 인사 직급강등 |
| | - (2016.9)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
| | - (2016.9) 한국인 비즈니스 비자 발급 절차 강화 |
| | - (2016.11) 중국내 롯데 세무조사, 안전점검 강화 |
| | - (2017.3) LG생활건강 항저우공장 소방점검, 가동중단 압박 |
| 중국 기업 | - (2017 1/4분기) 현대차 중국내 매출 급감 |
| 중국 기업 | - (2017.3) 중국SINOPEC, 한국 조선업체와의 선박 발주 협상 취소 |
| | - 제주 진출 중국 녹지그룹의 대규모 의료단지 개발사업 차질 발생 |

자료 : 각 언론자료 종합.

③ 유통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면세점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면세산업의 대중국 매출의존도는 64%에 달하며, 구매 고객수 의존도는 78%에 달함
 -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사드 부지 계약(2016년 2월) 체결 전·후 각각 1달간,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627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중국인 이용객 수는 48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감소
 - 한국면세점협회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 면세산업 피해는 연간 4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 측 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측 기업들의 피해도 다소 확산되고 있음
 - 중국은 사드보복 일환으로 한류 제한령, 홈쇼핑에서의 한국제품 편성축소,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실행
 - 중국 측에서도 한국제품을 취급하는 자국인 보따리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제품 통관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따른 자국 업체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음

< 한국 면세산업의 중국인 비중 >

< 한중 양국 유통관련 피해 의심사례 >

| 구분 | 전체 | 중국인 (비중) | 구분 | 주요 내용 |
|--------------|---------|-----------------|------|---|
| 매출액 (억 원) | 122,000 | 78,060 (63.98%) | 한국 측 | - (2016.8) 중국당국, 한류 제한령 구두 지시 - (2016.11) 중국 홈쇼핑에 한국산 제품 편성 축소 - (2017.3)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
| 구매 고객수 (만 명) | 2,058 | 1,614 (78.43%) | 중국 측 | - 중국인 보따리 장사꾼에 대해 자국 세관통과時 한국제품 검사 강화 -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따른 중국현지 납품업체 피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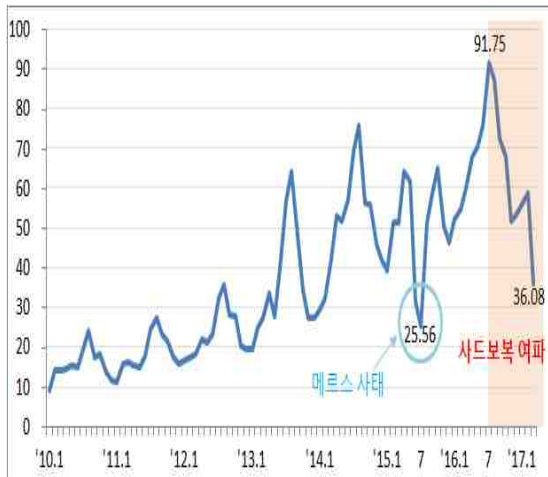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 보도자료
주 : 2016년 기준임.

자료 : 각 언론자료 종합.

④ 관광

- 올해 3월부터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¹⁾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관광손실이 약 7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
- 訪韓 중국인은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이후 감소세 지속
 - 월별 訪韓 중국인은 2017년 7월 약 9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사드배치 결정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7년 3월에는 약 36만 명으로 급감
 - 이에 따라, 올해 4월~12월까지 訪韓 중국인이 전년대비 40%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은 약 63억 달러(한화 약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²⁾
- 한편, 일본, 태국, 필리핀 등으로의 국내 출국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관광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관광부문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상대적으로 일본, 태국, 필리핀 등으로의 국내 관광객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올해 訪中 한국인 관광객이 2015년의 20%가 줄어든다면 중국의 연간 관광손실은 약 9억 달러(한화 약 1조 4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³⁾

< 월별 방한(訪韓) 중국인 추이 >
(만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한국의 국가별 출국자 현황 >
(만 명)

| 구 분 | 2010 | 2016 | 2017(1~2) |
|----------|-------|-------|-----------|
| 전체(100) | 1,249 | 2,238 | 457 |
| 중국(23.0) | 408 | - | - |
| 일본(20.7) | 244 | 509 | 123 |
| 태국(7.1) | 81 | 146 | - |
| 필리핀(6.9) | 74 | 148 | - |
| 홍콩(6.4) | 89 | 139 | 30 |
| 베트남(6.0) | 50 | 154 | 36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로 HRI 재가공.
주 : ()는 2015년 기준, 상위 6대 한국인의 주요국 출국자 비중(전체의 70.1%).

1) 2017년 3월 15일부터 중국정부가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및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조치가 시행.
2) 2017년 연간 訪韓 중국인은 약 536만명(4월~12월 중국인 입국자는 2016년의 40% 감소 가정)으로 가정하면, 지난해 방한 중국인 806만 명보다 271만 명이 적게 유입되었으므로,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2015년 중국인 1인당 지출액 2,319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2억 8,985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
3)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2013년 일본의 訪中 관광객이 2012년 대비 약 18% 감소. 이에 2017년 방중 한국인수가 약 355만 명('15년 444만 명의 20%)으로 가정, 2016년 1인당 한국인 평균여행 소비액 1,033달러로 계산하면, 2017년 약 9억 1,937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⑤ 문화·콘텐츠

○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는 가운데, 對 중국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

-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류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
 - 한류 관련 행사 취소뿐 아니라, 한중 합작영화 제작 중단, 클래식 공연 취소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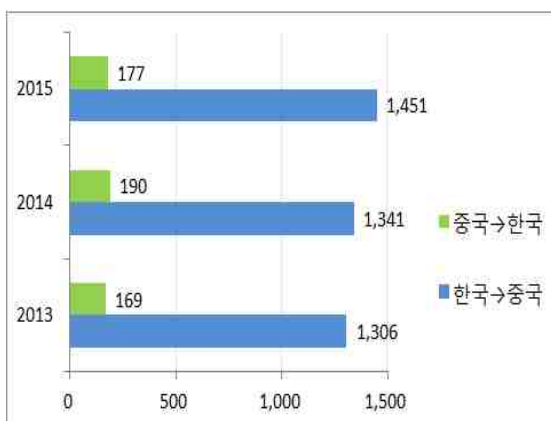
< 중국의 對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제재 조치 >

| 구 분 | 제재 조치 현황 |
|------------|--|
| 2016.07~08 | - 한류스타 팬미팅 및 K-Pop 공연 취소 - 한류 스타 중국내 방송 통편집 - 한중 합작영화 개봉연기 및 제작 중단 |
| 2016.09~10 | - 한국 연기자 출연 중국드라마 배우 교체 -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한중 동시방영 심의 지연 |
| 2016.11~12 | - KBS2 '화랑: 더 비기닝' 중국심의 통과 및 한중 동시 방영 확정 후 돌연 방영 중단(12.27) |
| 2017.01~현재 | - 조수미, 백건우 등 클래식 공연 취소 - 국립발레단 김지영 중국공연 불발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이에 따라, 한중간 콘텐츠 산업⁴⁾ 교류도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의 對中 수출은 전체의 약 27%(2015년 기준) 이며, 중국의 약 8배 수준

< 한중 상호 콘텐츠 산업 수출 비교 > (백만 달러)



자료 :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주 : 홍콩 포함.

< 중국의 對 한국 주요 콘텐츠 부문 규제 >

| 구분 | 규제 내용 |
|-------|---|
| 방송 | - 중외합작드라마 제작 및 인터넷 방송 출연 외국인인 사전 허가 필요 |
| 애니메이션 | - 해외 애니메이션 TV 방송시간 제한 및 쿼터제 시행 - 미성년자 대상 방송 시, 중국과 해외 편성비율이 7:3 준수 |
| 음악·공연 | - 해당 소재지 주관 부서 승인 및 공안 부서의 비준 업수 |
| 영화 | - 외국영화의 상영제한 및 쿼터제 적용 - 중외합작 제작사 설립 시 중국 자본비율이 51% 이상 의무화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로 재정리.

4)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11개 부문으로 분류됨.

⑥ 종합 점검

○ (종합 평가) 한중간 경제교류 현황을 볼 때, 사드문제로 교역 및 투자에서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관광부문의 피해는 양국 모두 증가할 것으로 우려

- 한중 양국 간 수출 및 투자 부문보다는 관광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양국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투자도 다소 피해가 예상되나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⁵⁾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對中 투자는 다소 감소가 예상
 - 다만, 관광 부문은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금지 등 규제로 우리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문화콘텐츠 부문도 방송, 애니메이션 등 일부 부문 피해가 전망됨

< 한중 간 경제 교류 현황 및 평가 >

| 구분 | 한국 | 중국 |
|----------|--|---|
| ① 수출 | - 對中 수출 급증 * 주로 식약 부문(화장품, 식품) 타격 예상 | - 對 한국 수출 증가 * 영향 미약 예상 |
| ② 투자 | - 최근 對中 직접투자 둔화 * 對中 투자 위축 영향 예상 | - 최근 對 한국 직접투자 둔화 * 투자 위축 영향 미약 |
| ③ 유통 | - 국내 면세점 매출의 타격 우려 * 향후 4~5조원 피해 예상(한국면세점 협회) | - 중국 면세업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④ 관광 | - 2017년 3월 중국 관광객 전년동월 대비 40% 급감 | - 訪中 한국 관광객 감소 예상 |
| ⑤ 문화·콘텐츠 | -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공연, 영화 등에서 對中 수출 차질 예상 * 한국의 對中 콘텐츠 수출은 2015년 기준 전체의 약 27% | - 對 한국 수출 영향 미약 * 한국의 콘텐츠 수입 총액 중 중국 비중은 2.3%(15년)에 불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추정 손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명목 GDP의 약 0.5%로 추정되며, 중국은 동기준 0.01%로 손실규모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5)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2013년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가 약 4% 감소했으나, 중국의 對일본 투자는 급증한 바 있음.

- 한국이 중국보다 많은 손실이 예상됨
 - 한중 양국 간 교역, 투자, 관광, 문화·콘텐츠 산업 등 4가지 측면에서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
 - 사드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최대 8.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명목 GDP의 0.5% 수준
 - 중국은 동기준 최대 1.1조 원 손실이 추정되어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

- 부문별로는 관광 부문에서 우리의 손실이 중국의 7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의 對中 수출은 주로 식약 분야 중 화장품, 식품 부문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며, 손실 규모는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특히, 관광 부문에서 우리의 피해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7조 원으로 보이며, 중국은 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사드문제로 예상되는 한중 양국 간 경제손실 추정 >

| 구분 | 한국 | 중국 |
|--------------|---------|---------|
| 수출 | 1.4조 원 | 손실이 미약 |
| 투자 | 영향이 미약 | 454억 원 |
| 관광 | 7.1조 원 | 1.04조 원 |
| 문화·콘텐츠 | 87.2억 원 | 손실이 미약 |
| 합계 | 8.5조 원 | 1.1조 원 |
| 명목 GDP 대비 비중 | 0.52%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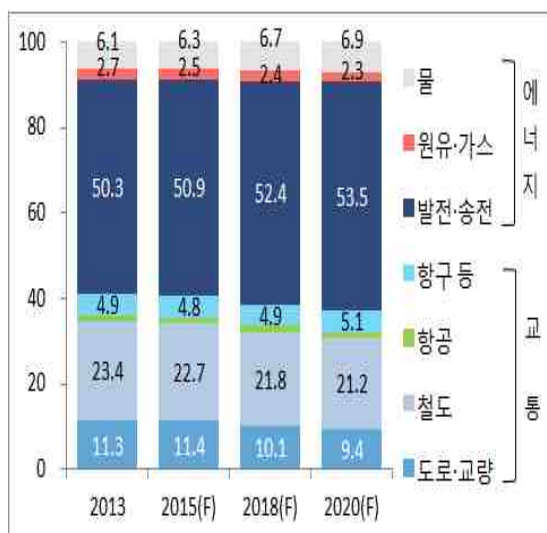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주1) 본 추정은 최근 상황에 근거한 2017년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양국의 손실 규모
- 2) 한국의 對中 수출은 식품 및 화장품 중심으로 1%(2015년 한국의 對中 식품 및 화장품 수출은 약 1.7%) 감소할 것으로 가정.
- 3) 투자는 과거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당시뿐 아니라, 최근 한중 상호간 투자 추이로 볼 때, 한국의 對中 투자가 1% 감소 가정(2016년 투자액은 p.3 참조).
- 4) 관광 부문은 p.5 참조
- 5) 문화콘텐츠 부문은 중국의 규제로 한국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콘텐츠 부문 수출 피해가 예상되므로 2015년 관련부문의 對中 수출액 1억 5,400만 달러의 약 5%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 6) 환율은 2017년 3월 평균 환율 적용, GDP(명목기준)는 2016년 기준.

3. 협력 방안 및 시사점

-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 강구를 통한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함
- (중국의 대규모 개발투자에 편승) 중국 내 인프라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등 凡아시아권 개발협력 프로젝트에도 전략적으로 편승해야 함
- 중국은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15~2020년까지 전체 인프라 중 에너지 인프라 규모 비중은 각각 59.1%에서 62.7%로 중국 인프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에너지 인프라 부문 중 발전 및 송전 계통망 부문의 인프라 비중은 2015~2020년 50%를 지속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동기간 교통 인프라는 38.9%에서 35.7%로 30%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중국 인프라 시장규모 : 2015년 2,119억 달러, 2018년 2,596억 달러, 2020년 2,965억 달러
- 또한, 중국을 넘어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凡아시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전략적으로 편승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중국 내에서는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신 실크로드 라인 형성으로 중서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
 - 더욱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凡아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유리해질 아시아 시장간 물류 체인 활용 방안 구축안 마련

< 중국의 부문별 인프라 시장 비중 >
(비중,%)



자료 : China Infrastructure Report('15.4Q).

<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

| 구분 | 내용 (참여국, 분야) |
|------------|--|
| 파키스탄 회랑 | - 중국, 파키스탄 - 철도, 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선,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 |
| 인도-미얀마 회랑 | -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 철도 및 도로 |
| 몽골-러시아 회랑 | - 중국, 몽골, 러시아 등 - 고속운송통로 |
|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 - 중국, 러시아, 이란,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12개국 - 국제 철도간선 |
| 중앙-서아시아 회랑 | -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8개국 - 석유 및 가스 수송관 |
| 중남반도 회랑 | -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철도 및 도로 |

자료 : 中國發展改革委員會.

-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 개시) 한·중 간 서비스 부문의 FTA 추가협상은 아직 착수하지 않은 만큼, 향후 서비스와 투자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win-win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임
-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건설서비스, 관광서비스 등 분야에서 추가 자유화 약속이 취해지거나 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은 FTA 발효 후 2년 내(늦어도 2017년 12월)에 개시하여, 협상개시 후 2년 내(늦어도 2019년 12월)에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에 따라 진행기로 합의
-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2015년 12월 한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에서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약속한 상태

< 중국의 선진국 기체결 서비스 FTA의 주요 협상조항 비교 >

| 조항(條項) | 조항(條項)의 의미 | 적용 사례 |
|--------|--|----------------------------------|
| 최혜국 대우 | •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에 합의 | 중·뉴질랜드, 중·호주 |
| 상호승인 | • 양측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규칙상의 표준 및 규범에 대해 상호 승인 또는 수락하는 것에 합의 |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스위스, 중·호주, 한·중 |
| 분쟁해결 | • 당사국 간 서비스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상호조정,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합의 | |
| 보조금 | • 한 국가가 자국 서비스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해 상대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관해 협의하는 것에 합의 | 중·뉴질랜드, 중·스위스, 중·호주, 한·중 |

자료 : 중국이 체결한 각 FTA의 서비스분야 협정서를 바탕으로 HRI 작성.

주 : 서비스 협정에서의 ‘최혜국 대우’ 조항은 상품 협정에서 규정하는 “최혜”의 의미와는 달리, 3국과 체결한 기체결 협정보다 ‘더 나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no less favored)’는 뜻을 지님.

□ 시사점

○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역 발전의 중심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중간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 간에 긴밀한 분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더욱 고도화된 파트너십 지속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배척과 통상압력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사드 등 군사·외교, 경제적 카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한중일 FTA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간 경제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등 자유주의 확산에 노력해야 함

- 둘째, 국내로의 차이나머니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과도한 對中 의존도 편중 양상은 점차 억제하는 대책도 강구

-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 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이용할 수 있음
- 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도 예상되므로 경영권 방어 전략 구축, 기술 보호 대책 마련 등 전략적인 대응 필요
- 특히, 일부 특정 지역에서 차이나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태생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투자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

- 셋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중장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편승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꼭 요구됨을 어필할 필요성을 지속 모색

- 일대일로(一帶一路), 4대관 3대 경제벨트⁶⁾ 등 지역별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對 중국 지역별 투자 전략 모색

6) 동부, 중서부 및 동북 등지에 걸쳐 4대관(四大板塊) 구축을 추진하고 이어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창강(長江) 경제벨트 등 3개 경제벨트(三个支撑带)를 결합하는 전략.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매개로 한 양국 간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에서 창출될 경제적 이익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넷째, 최근 지연되고 있는 한중 간 문화, 관광 등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 국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확산을 위해 문화, 관광 등을 매개로 한 인적 교류의 폭 확대 모색
 - 최근 한중 간 국가 차원의 관계 변화가 민간 부문 교류·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다섯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상호 대체 불가능한 협력동반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경제 외에 외교, 안보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기제를 마련해야 함
 - 올해 2017년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당지도부 준비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한중간 외교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절호한 기회임
 -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조정자(Mediator)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함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위원 (2072-6274, junius73@hri.co.kr)